

주요 정책의 쟁점

(1998. 5.21~6.20)

일자	정책	주된 내용	수급 의견	보완 의견
5.22	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 폐지	· 외국인인 상장 및 코스닥 등록 주식 투자 한도 폐지 · RP 등 단기 금융 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	· 외국인 투자 유도로 증시 활성화 유도	· 단기성 자금 유출입에 대한 보완책 마련 시급
5.24	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	· 자회사 지분율 50% 이상에서 30% 이상으로 완화 · 지주회사 설립시 기업 법인세·특별부가세·양도세 감면	· 설립 요건 완화로 지주회사 설립 용이	· 30대 그룹의 경우 상호 빚 보증 완전 해소 등 요건이 까다로움
5.26	1999년 세수 확보 대책 마련	· 내년 재정 적자 11조~12조 원 예상 · 공무원 축소 및 임금 동결 · 교통세율 인상, 담배 부가세 추진	· 정부 부문 축소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 기대 · 세수 증대 효과	· 국민 세 부담 가중 · 간접세율 인상으로 인한 역진적 소득 분배 우려
5.29	조세감면제도 개편	· 내년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대상 축소 · 조세감면일몰제 도입 · 정기적인 조세 감면 내용을 공표하는 조세 지출예산제도 도입	· 조세감면체제 정비로 효율성 증대 · 세수 증대 효과	· 개인과 기업의 세 부담 증가
6.9	기업 결합 심사 기준 완화	· 시장 점유율 증가율이 미미(5% 미만)하거나 상위 3사가 70%를 넘더라도 1위 또는 2위와 격차가 큰 경우 M&A 허용 · 부실 기업 요건 명시	· 국내외 기업간의 M&A를 통한 구조 조정 촉진 목적 · 부실 기업 처리에 정부가 적극 개입할 근거 마련	· 기준 적용에 자의적 판단 가능성 · 소송 시비 및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 대비
6.10	SOC 투자 외국인 소유 허용	· 외국인 SOC 직접 투자시 최장 50년간 소유권 행사 가능	· SOC 투자 촉진 및 외자 유치 효과 기대	· 외국인의 소유권 행사로 인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
6.18	1차 퇴출 대상 기업 발표	· 5대 그룹 계열사 20개 포함 55개 기업 · 대상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 및 계열사 자금 지원 중단	· 불확실성 제거로 신인도 회복 효과 · 기업 구조 조정 촉진	· 실업자 양산에 대한 대책 미흡 · 자금 흐름 경색으로 연쇄 부도 가능성 · 법정 관리나 청산 관련법 정비 필요